

2017

Report

of Trend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 정책

동향보고

2017. 12. part1 제 87 호

Contents

I . 정부 추진동향

1. ' 규제프리존 표류 ' 서로 네 탓 .. 입법 흐지부지되나 3
2. 류승한 국토연구원 센터장 , “공공기관 , 지역육성과 일자리 창출 중요” 4
3. 국민의당 · 바른정당 " 규제프리존법 등 입법공조 재확인 " 5
4. “균형 발전” “출혈 경쟁” ... 고향세 빛과 그림자 6
5. 지역발전위 , 일본과 ' 지역정책 협력체계 구축 ' 추진 8

II . 수도권 추진동향

1. 박원순 “세종시 수도 이전 , 반대하지 않는다” 9
2. 인천항 발전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정부 과도한 규제 해제해야 10
3. 남경필 " 이재명 , 정치싸움 그만 걸고 국가성장전략 고민하라 " 11
4. 이천 · 광주 · 여주 등 수도권에 겹규제 ... 투자 17 조원 막혀 12
5. 남경필 “수도권 규제 철폐하고 초강대도시 만들어야” 13

III . 비수도권 (지역) 추진동향

1. 이철우 국회의원 . 낙후된 지방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전면 수정해야 14

1. ' 규제프리존 표류 ' 서로 네 탓 .. 입법 흐지부지되나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0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경제

02

주요내용

■ 靑, 민원 홍수 우려에 눈치보기, 정부는 " 국회서 낮잠 " 책임 미뤄, 興, 前정권 정책 내세우기 부담, 野도 정계개편 · 선거준비로 손바 ... 관련 입법 논의 10 개월째 중단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지부진한 규제혁신에 대한 답답함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자 정책 당국자들이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고심
- 그러나 행정과 관행의 벽에 막힌 신기술 · 신상품 개발 및 상용화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됐던 '규제프리존' 제도 도입은 여전히 불투명
-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 국회는 규제프리존 입법 논의를 놓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소극적인 입장
 - 우선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나 이해당사자 간 민원 홍수를 두려워하는 눈치
 - 한 고위관계자는 : 원래 규제프리존은 일부 지역들만을 선정해 그 권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를 허용하는 시범사업 성격이 강했는데 문제는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
 - 규제프리존 지정 지역이 실제 산업분포와 일치할 수 있느냐는 것도 고민거리
 - 예컨대 A 지역을 드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했다면 다른 곳에 본사나 생산 · 연구시설을 둔 드론 기업들이 A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음
 - 그렇다고 기업이나 지자체들의 민원을 들어주려고 여기저기 규제프리존 지정을 남발하면 사실상 전국이 규제프리존화돼 기존의 규제제도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문제가 생긴다고 걱정
- 정부와 국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핑퐁게임
 - 기획재정부 등은 올 초까지도 규제프리존 도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듯했으나 이후부터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 숨죽이고 있다가 5 월 대선 이후부터는 소극적 태도로 돌변
 -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 : "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지난봄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위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실제 국회 속기록을 보면 규제프리존법 입법 논의는 지난 2 월 2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한 뒤 이후 10 개월 가까이 중단된 상태
- 입법논의가 중단 상태인 이유는 당정 모두 지난 정권 대표 정책으로 추진됐던 규제프리존 입법을 새 정권 들어서 전면내세우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
 - 야권으로서도 당장 정계개편이나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분주한 상황에서 굳이 난도는 높고 대중성은 낮은 규제프리존 문제에 집중할 이유가 없는 상황
 - 따라서 현재의 분위기라면 적어도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규제프리존 입법 작업의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최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스몰딜' 방식의 규제 혁신을 대안으로 꺼냈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처럼 방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빅딜' 방식보다는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고 입법 등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미시적인 규제부터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읽힘

2. 류승한 국토연구원 센터장, “공공기관, 지역육성과 일자리 창출 중요”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0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미디어 SR

02

주요내용

■ 12월 5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CSR 포럼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이 주관 2017 사회가치포럼 개최

-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센터장이 발표
-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센터장
 - 우리나라의 각 지역이 많이 발전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균형발전이라고 하기엔 미흡한 점이 많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법 제정이 있었지만, 대개 단일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한계가 있음
 - 지역 발전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 기존 정책의 취약점으로 인해 지방에서는 여전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심한 실정
 - 류 센터장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우수한 인력의 이전과 정착을 통해 정주환경을 구성하고, 공공기관과 연계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큼
 - 양질의 도시기반을 통해 산학협력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얻을 수 있음
 -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토 공간의 비효율성 역시 개선할 것으로 예상
-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은 국가적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참여
-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 요소에 지역협력 실적 평가를 강화하여 적용
 - 지역경제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사회공헌활동의 최우선 사업이 되도록 추진
- 공공기관은 지역구매와 R&D 참여를 강화
 - 공공기관은 지방 도시의 주요 구매자이자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역 내 기업의 주 납품 고객이 되어 납품 실적을 쌓아주는 것 역시 지역 경제는 살리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공공기관 산하기관 및 연관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방안을 마련
 - 전북혁신도시의 도시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도시 내 특성화 시설이나 기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여러 기관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
 -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이 부족하기에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함
- 도시 공간 및 정주환경의 정비와 개선을 강조
 - 개발에 필요한 정주환경 관련 요소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혁신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는 것이 필요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사업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여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정주 여건의 개선 방안 중 하나

3. 국민의당 · 바른정당 " 규제프리존법 등 입법공조 재확인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07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Chosun Biz

02

주요내용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법안처리에 공조기로 재확인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간 정례회동인 국민통합포럼의 '양당 정책연대의 과제와 향후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
-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 남은 정기국회 기간과 그 이후에 중요한 입법이 기다리고 있음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입법공조가 이뤄지도록 하고, 입법공조를 통해 양당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정책연대 협의체의 갈 길
 -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 국민통합포럼은 지난 달 30일 정례 회동에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의 처리에 양당이 연대
- 국민통합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 12월은 국회에서 입법을 공조해야 하는 시점만큼, 양당이 지금까지 통합포럼에서 계속 논의했던 규제프리존법 · 산업법 · 방송법 · 선거구제 개편 · 선거 연령 18세 인하 등에서 찰떡 공조가 이뤄져 국민을 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해주리라 생각
 - 국민의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바른정당과의 공조가 이뤄지지 못한데에 거듭 사과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 예산안 협상이라는 게 성격상 아주 좁은 공간에서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다보니, 바른정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협상이 마무리돼 죄송
 - 양당 간 정책 공조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
- 이용호 정책위의장
 - 이번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책연대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
 - 공무원 증원 예산이나 일자리 안정 자금 문제는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인데, 예산 협상에서 기대만큼 지키지 못해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자존심이 상했다고 밝힘
-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부담분의 세금 직접지원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을 비판
 - 김동철 원내대표와 다른분들이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세연 정책위의장
 -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애를 써준데 대해서 감사하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아쉬운 대목
 -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입법에 있어서는 처음 기대했던 신뢰가 쌓이길 바람

4. “ 균형 발전” 출혈 경쟁” ... 고향세 빛과 그림자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0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서울신문

02

주요내용

■ 고향세 도입 때 ‘답례품 제공’ 방안 포함, 지자체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제화 필요
 ■ 행안부 “지역 공동화 막고 경제 활성화” 日시행착오 교훈 삼아 보완장치 마련 중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세) 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 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
-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기부금을 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 현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와중이지만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온적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명분만 놓고 보면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이면에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한다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 8 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고향세 관련 법안 10 건이 제출
 - 더불어민주당 (김 두 관 · 안 호 영 · 이 개 호 · 전 재 수 · 홍 의 락 의 원) 과 자유한국당 (강효상 · 김광림 · 박덕흠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 황주홍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음
- 의원 발의 법안들은 고향으로 전달되는 기부금의 이전 방식에 따라 크게 세액공제와 세입이전으로 나눌 수 있음
 - 이 중 세액공제는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기부금 납부자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사후에 돌려주는 방식
 - 세입이전 방식은 납세자가 아예 소득세 중 일부가 자신이 지정하는 지자체 재정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신청하는 방식
- 고향세의 시초는 일본
 - 2008 년 아베 신조 1 차 내각이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2007 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처음으로 제안
 - 2010 년 지방선거에선 한나라당 (현 자유한국당) 이 핵심 공약으로 검토
 - 지난해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향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 대 과제’ 와 ‘자치분권 로드맵’ 에 포함시키면서 급물살
- 그러나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꼽는 고향세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 간 과당 경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은 반면 지자체의 재정 확충이나 지역 간 격차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 역시 고향세를 활성화하기 위해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
 - 하지만 답례품 제공이 자칫 지자체 사이에 출혈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 이미 일본에서도 고가의 답례품 제공을 둘러싼 잡음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
 - 더욱이 답례품 제공을 법제화하려면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도 개정해야 함
-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답례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답례품 경쟁 때문에 지자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고려
 - 또 고향세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 주면 고소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어 공평 과세와 관련한 사회 갈등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음
- 행안부의 생각
 - 이 제도는 농어촌 소도시에 큰 도움을 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공동화를 막고 특산물 판로도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짐
 - 행안부는 현재 10 년 전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의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도입 단계부터 몇 가지 보완 장치를 마련 중

4. “ 균형 발전” 출혈 경쟁” ... 고향세 빛과 그림자

02

주요내용

- 우선 지자체 기부금 모금이 준조세나 강제 모집 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고민하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금 접수를 엄격히 제한
- 답례품 제공에 대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준비 중
- 답례품 제공을 지자체 자원에 맡겼던 일본에서는 답례품 관련 비용이 총기부금액의 40%에 달했음
- 이에 따라 답례품 가격 상한을 정하고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등을 제공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

■ 행안부 설명자료

2017.12.11. 지역공동체과 보도자료

-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향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증세로 오인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답례품 제공 등 과열경쟁 우려와 관련
 - 現 법률안에는 과열경쟁이 있었던 일본 사례를 감안해 답례품이 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답례품은 국민참여 유도, 지역특산물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재정 확충이나 지역간 격차 해소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 관련
 - 일본에서도 '16년 약 2조 8천억원의 성과를 보였고 답례품 개발을 통해 낙후지역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 등이 있어 효과를 입증함
 -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町) 사례: '14년 주민세수의 2배인 100억원(전국 3위) 모금, 지역총생산 상승 및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등 효과
- 고소득자 절세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우려와 관련
 - 現 법률안은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정치기탁금 세액공제 체계와 동일하게 10만원까지만 전액공제
 - 또한, 일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소득수준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공제가 이루어짐
 -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2천만원 16.5%, 2천만원 초과분 33% 세액공제
 - 일본의 경우, 기부금액 대부분을 공제하면서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커져 고소득자 절세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와 같은 장치를 통해 우려를 해소
- 기부금을 통한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 관련
 - 기부금은 지자체 재정력을 보완하는 수단이므로 일반회계가 아닌 별도 기금을 설치해 기부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
 - 인건비·채무상환 등에 사용을 제한하고, 사용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지증진에 한정함
-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과 관련
 - 일본은 세액공제시 지방의 부담률이 55%~95%이지만 우리나라 조세체계에서는 국가가 91%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분권에 기여
 - 또한, 답례품 경쟁을 방지하고 홍보·모집에 있어서도 지자체의 인력·예산 차이가 기부금액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발의된 법안에 반영되어 있음

5. 지역발전위, 일본과 '지역정책 협력체계 구축' 추진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1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t

02

주요내용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하 지역위)와 일본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가지야마 히로시 梶山 弘志 대신·이하 창생본부)가 '지역정책 협력체계 구축'**

- 지역위와 창생본부는 11 일 일본 도쿄 중앙합동청사 8 호관 특별 중회의실에서 지역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
 - 이번 협약은 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또는 지방창생 관련 정책의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서는 양국의 관련 정책 조정 역할을 하는 기관 간 교류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추진
- 협약 주요골자는 지역 균형발전 또는 지방창생에 관한 각종 정책 연구, 대응의 추진현황, 성공사례 등 관련 정보의 교류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것
- 이번 국제 협약은 지역위 설립 (2003년·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후 처음이며 일본의 창생본부 역시 2012년 설립 이래 첫 국제 교류
 - 이날 행사는 송재호 위원장, 가지야마 히로시 (梶山 弘志) 일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담당대신이 주관
 - 한국 측에서는 국회 오영훈 의원, 유성엽 의원과 지역위 본위원인 강현수 위원, 김영배 위원, 변창흠 위원 등이 관계자로 동석
 - 일본 측에서는 나가사카 야스마사 (長坂 康正) 내무부대신 정무관, 가라사와 타케시 (唐澤 剛) 지방창생통괄관, 이토 타다히코 (伊藤 忠彦) 중의원
- **송재호 위원장**
 -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창생정책이 활발히 교류되길 바램
 - 앞으로도 지역위는 유럽 등 균형발전 선진국 등과의 정책협력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제고해 나갈 예정
- 한편 한국 지역위와 창생본부는 2018년 한국에서 정례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이를 위해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함

1. 박원순 “세종시 수도 이전 , 반대하지 않는다”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0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news1

02

주요내용

■ 박원순 서울시장은 1 일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밝힘

- 박 시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충북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원순씨에게 길을 묻다’ 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시민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음
 - 충북 NGO 센터 . 청년유권자연맹충북지부,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충북대 학생회, 충북희망새물결, 충북지방자치포럼이 공동 주최
 - 주최 측이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질문 내용 : 세종시로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 박원순 시장 : 저는 사실 수도 이전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워싱턴은 완전한 행정수도이지만, 비즈니스 수도는 뉴욕이지 않느냐는 의견
 -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을 우선했기 때문에 (수도 이전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를 거치는 등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
- 박원순 시장 : 서울시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도 반대한다고 주장
- 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지방으로 가는데, 규제가 풀리면 다 수도권으로 온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
-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과정 (사회적 합의) 가 전제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수도 이전을)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
- 박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에게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

2. 인천항 발전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정부 과도한 규제 해제해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05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경기일보

02

주요내용

■ 인천항 발전을 위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인천시 조형도 항만과장은 5 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해수부 주최로 열린 「인천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
- 인천시 조형도 항만과장 ‘인천항 장단기 개발 및 운영 전략’ 에 대해 주제 발표
 - 현재 인천항의 여건은 지난친 법적 규제, 계획수심 미확보, 항만관련중심체 (정치권과 유관기관 등 네트워크) 가 부족해 경쟁력이 약화
 - 정부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 대 규제권으로 나눠 과도하게 수도권을 억제하고, 공장총량제 및 배후부지 제조업 유치를 제한해 수출입 불균형이 심화
 - 인천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는 “인천항은 25% 의 정부재정부담비율을 받고 있어 타 항만 보다 낮아 50% 로 확대되어야 하며 자유무역지역확대 지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임대료 체계 확립이 필요
 - 인천항 제 1 항로의 경우 계획수심이 14m 지만 실제수심이 14m 미만인 곳이 54 곳이며, 이에 따라 입출항 대기에 따른 추가 용선료가 발생하는 만큼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계획수심 확보가 시급
- 인천발전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 ‘인천항 경쟁력 강화 전략’ 에 대해 주제발표
 -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부지를 적기에 조성해야 하고, 배후부지에 고부가가치화 전략 및 수도권 화물 유치전략, 크루즈 산업 등을 육성
-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인천항 미래 발전방향’ 에 대한 토론회
 - 김형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주협회, 인천항만물류협회, 고려해운 등에서 패널로 참석
-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
 - 이번 세미나가 인천항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의견 수렴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거듭나 인천항 미래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3. 남경필 " 이재명 , 정치싸움 그만 걸고 국가성장전략 고민하라 "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09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아시아경제

02

주요내용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 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 정치싸움 그만 걸고 국가성장전략 좀 고민하십시오 !" 라고 지적

•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날 자신의 블로그

- 이재명 시장님께 물겠습니다. 이 시장님은, 경기도 정책에 트집 잡는 것 말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전략에 대해 한번이라도 제대로 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고민을 했다면, 시대흐름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저의 견해에 좀 더 진지하게 응답하셨을 겁니다
- 준공영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안전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도입한 미래지향적 정책
- 경기도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경기도의회도 동의한 정책, 전해철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도 준공영제가 민주당의 ' 당론 ' 이라며 찬성 입장
- 균형발전이란 명분 하에 지금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 때문에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
-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수도권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은 분명 시대적 모순
- 뉴욕, 런던, 도쿄는 규제를 풀고 초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해 자체의 도시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음
- 서울과 경기도 등 우리의 수도권도 인구, 인프라 등에서 이들 대도시와 어깨를 견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생각과 패러다임을 조금만 바꾸고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

4. 이천 · 광주 · 여주 등 수도권에 겹규제 ... 투자 17 조원 막혀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1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매일경제

02

주요내용

■ 5년간 일자리 96 만개 허공에...34년된 수도권정비계획법, 4차 산업혁명시대 맞게 정비

- 경기도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규제에 묶여 기업들이 자기 땅에 마음대로 공장을 짓거나 늘릴 수가 없음
 - 국내 최대 간장 제조업체인 샘표식품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경기도 이천 기존 공장에 시설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막혀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 경기 동부 권역 최대 기업인 SK 하이닉스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시급하게 이천 공장 증설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 SK 하이닉스는 최소 15 조원 규모의 M16 공장을 물류 최적 입지인 이천에 짓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타이밍을 앞당기기 위해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논의 중
- 이천, 광주, 여주, 가평, 남양주 등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동부지역에서만 수도권 규제로 묶인 중견기업의 투자 수요가 2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기 동부지역 기업들에 투자 의향을 직접 물어 실태를 파악한 내용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조사 결과
 - 샘표식품 같은 경기 동부지역 72 개 기업이 공장총량제 등의 수도권 규제가 풀릴 경우 총 1 조 9920 억원의 시설 투자를 하는 것으로 집계
 - 이에 따른 추가 고용 효과는 3661 명에 이른다. 여기에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까지 합치면 17 조원의 투자가 새로 발생하는 셈
 - 실제 1984년 자연보전권역이 지정되기 전 이 지역에 설립된 공장은 총 32 개로 1 조 1957 억원이 투자되었지만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후 지금까지 이 지역의 공장 신증설 투자는 38 개사, 7963 억원으로 대형 투자가 자취를 감춰 투자액이 3분의 1 토막
- 수도권 규제 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만 봐도 선명하게 알 수 있음
 - 이명박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거 완화한 2009년 이후의 자료만 보더라도 서울·경기·인천은 5년 동안 연간 6.1% 씩 투자가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연평균 15.3% 씩 급증
 - 비수도권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속도가 수도권에 비해 2.5 배 정도 빠름
- 더 큰 문제는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포기한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버린다는 데 있음
 - 다국적 백신기업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경기도 화성시에 백신 제조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싱가포르로 옮김
 - 미국계 전력용 반도체 생산업체 페어차일드코리아 : 2000년대 초 경기 부천 공장 증설계획을 추진했지만, 국내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중국에 8000 만달러를 투자
 -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 : 2007년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남쪽 간석지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지으려 했으나 좌절
-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내 경제구조가 제조업 기반으로 움직이던 1983년 시행
- 이제 서비스산업 기반의 3차 산업 시대를 넘어서 융합지식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낡은 규제들은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셈

5. 남경필 ‘수도권 규제 철폐하고 초강대도시 만들어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13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한국일보

02

주요내용

■ 경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한 1 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서울도’ 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

- 남경필 지사는 13 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열린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지난 40 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대도시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는 도발적인 주제를 제시
 - 이미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 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
 -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초강대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1 차 과제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함
 -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토이용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지속 논의해나갈 것
 -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90.5% 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인데 수도권 규제를 강화해 수도권을 늘렸고,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 몰린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부 외국으로 나갔다고 꼬집었음
- 남 지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광역대도시권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5 개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도지사를 5 명만 뽑아서 시·군 간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함
 - 작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넘기고 미래의 큰 틀을 설계할 수 있는 광역 지도자를 뽑아서 해외 도시와 경쟁해야 함
-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의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도 제시

1. 이철우 국회의원 . 낙후된 지방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전면 수정해야

01

개요

보도형식	언론기사	보도일자	2017.12.11
보도대상	전국	보도매체	아사아투데이

02

주요내용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지역의 SOC 사업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을 지난 8 일 발의

- 예비타당성조사의 수도권 - 지방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발의
 -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1999 년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
 - 경제성 중심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 매몰되면서 인구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지방에 역차별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음
- 개정안
 - 지방낙후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예비타당성운용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법안으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동시에 지방균형발전 가중치를 기존보다 높게 규정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건설사업의 균형발전 가중치인 25~35% 의 비율을 40~45% 로 상향조정하며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시 가중치 최소
 - 최대 범주가 10~20% 의 편차로 구성되어 연구자 임의로 평가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중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최소화
- 따라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에 편중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던 지방의 SOC 사업 등 국책사업이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만 강조하고 있어 경제적 유인책인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낙후된 지방은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사실상 국책사업을 진행조차 할 수 없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함
 - 지방에 대형국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의 경제 인프라를 갖추면서 지방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 지방의 경우 교통망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인구유인 요인이 부족해 수요와 편익이 낮은 것이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 등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수요를 늘려나가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으로 전환되면 낙후된 지방의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